

國家電算化事業 추진체계 발전방안 제2차 시안 마련 —전산망 조정위원회—

전산망조정위원회는 지난달, 국가전산화사업 추진체계 발전방안 제2차 시안을 마련했다. 제2차 시안은 올 연초 수립한 제1차 시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재정리한 것으로 전산망 조정위원회는 이 시안을 다시 관련기관과 협의·조정하여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2차 시안의 주요내용을 발췌 요약한다.

〈편집자 註〉

추진전략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 추진

- 공공부문 : 국가전산화의 기준과 표준제공을 위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
 - 90년대 중반까지 5대 공공전산망을 우선 구축.
 - * 행정망, 금융망, 교육·연구망, 국방망, 공안망
 - 2000년대초까지 5대 전산망을 국가기간전산망으로 통합·운영.
- 민간부문 : 기업 및 가계의 자율적 전산화 촉진
 - 정부는 전산화의 기준과 표준제공, 정책지원에 주력.
 - 국민 전산교육과 파급효과 큰 시범사업 중점 추진.

○이용자와 전문가를 조직화

- 이용자는 소관업무 전산화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 활용 : 전문가는 이용자 요구 사항 반영하여 기술지원.
- 이용자—쉽고 편리하게 컴퓨터를 이용, 업무 전산화.
- 전문가—이용자가 업무를 전산화할 때 최적의 기술지원.

○공공지출과 산업육성을 연계화

- 공공기간 전산화 투자를 국내 정보산업 육성과 연계, 국내산업의 국제 시장 진출 및 국제 경쟁력 강화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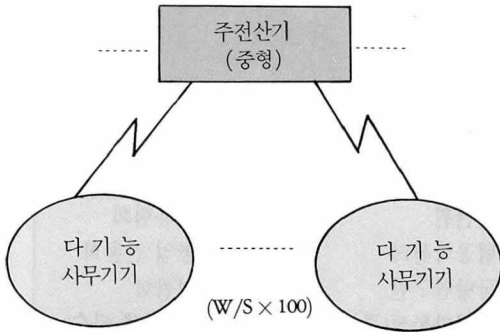
○일반 국민의 전산 이용능력 제고

- 1가구 1컴퓨터 보급 추진
 - 2000년대 초까지 컴퓨터 단말기 1,000만대 보급.
- 범국민 전산교육 실시
 - 분야별, 대상자별 구분 교육 실시.
 - 교육기관과 과정의 다양화를 통한 전산교육수요의 확대 창출.
 - 전산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한 전산 교육기회 확대창출.

○기본 전산시스템의 독자적 확보·운영(정부)

- 표준화와 호환성 보장
- 외국 의존 탈피(Machine Independence)
 - * 기본시스템이외는 국내·외 완전경쟁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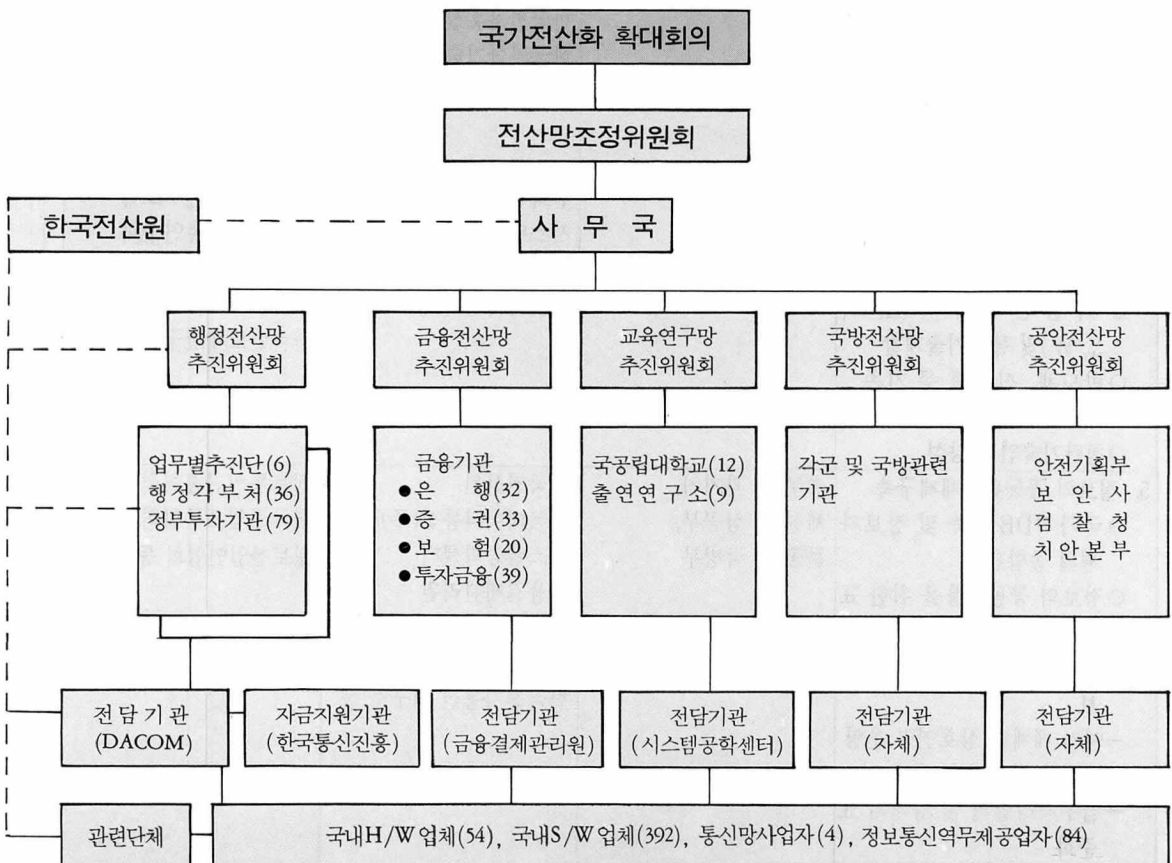
〈기본전산시스템〉



〈추진단계〉

단계별 부문별	1 단계 (현재-'90)	2 단계 ('91이후)
다기능사무기기	외국개인용컴퓨터 [IBM PC XT] [한국표준코드]	한국형W/S [한글 OS]
주전산기	외국기종도입 · 조립	한국형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존S/W (WP, DB, SS)	전산통신S/W (자료호환)

〈추진조직〉



국가전산화 추진체제의 보강·발전

가. 국가전산화를 위한 정책과제별 업무관장 현황

구 분	정부부처	전문기관	민간전문단체
1. 미래사회대비 종합정책의 수립·추진	* 담당기능 부재	* 담당기능 부재	* 담당기능 부재
2. 국가전산화사업추진 ○ 관련법령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 민간분야 전산화지원	과기처, 상공부, 총무처, 체신부, 안기부, 국방부, 내무부, 문교부등	한국전산원 시스템공학센터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데이터통신(주) 금융결제관리원 한국통신진흥(주) 등	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자공업 진흥회 정보산업연합회 기타 이익자단체 다수
3. 정보산업의 육성 ○ 분야별 육성 -H/W 산업 육성 -S/W 산업 육성 -통신산업 육성 ○ 분야별 사업의 균형 발전 촉진 ○ 공급능력 확대 및 수요창출	과기처, 상공부, 체신부 * 균형발전 기능 없음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데이터통신(주) 한국통신진흥(주)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금융결제관리원 등	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합회 등
4. 전산화 및 정보산업 관련 첨단기술 개발 ○ 기술개발체제구축 ○ 최첨단 컴퓨터 (H/W, S/W) 및 통신기술개발 ○ 반도체, 신소재 등 기존 기술연구개발 ○ 첨단기술인력 양성	과기처, 상공부, 체신부	한국전자통신 연구소 시스템공학센터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문화센터 등	한국컴퓨터연구조합 컴퓨터통신총연구회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연구조합 한국반도체연구조합 등
5. 정보의 공동활용체제구축 ○ 국가적DB 구축 및 정보자원의 종합관리 ○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표준화사업 추진 -이기종시스템간 호환성 확보 -여러 매체간 상호연결 운영 -전산망 기술기준 제정 -업무처리방식 및 양식의 표준화 ○ 종합정보통신망(ISDN)구축	총무처, 과기처, 체신부, 상공부, 문공부, 국방부	한국전산원 한국데이터통신(주) 시스템공학센터 금융결제관리원 통신개발연구원 한국표준연구소 한국전자통신 연구소 등	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공업표준협회 정보산업연합회 등

구 분	정부부처	전문기관	민간전문단체
6. 이용자의 대응능력제고 시책 ○컴퓨터 단말기의 대량 보급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 개발 시행 ○국민전산교육 실시	총무처, 문교부, 체신부, 문공부, 국방부	한국통신진흥(주) - 통신개발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전산요원훈련센터 시스템공학센터 정보문화센터 등	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등
7. 정부의 지원체제 구축 ○세제, 금융 및 재정 지원 ○행정제도적 지원	상공부, 체신부, 문공부, 재무부, 기획원	한국은행 한국통신진흥(주)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자공업 진흥회 등

나. 문제점

- 정부의 종합정책 수립·추진기능의 미약
- 국가전산화 및 정보산업 관련 정부기능의 분산과 중복
- 전문기관간 기능 및 업무한계의 불명확화 유사기능 중복으로 인적·물적 자원 낭비 및 사업추진력 약화
- 민간전문단체의 자율적 성장 발전 기반 취약
- 국가전산화 관련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제도 미흡

- 전문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기능의 분담·전문화
- 민간단체의 자율적 성장 발전 촉진

주요내용

- 부처별 업무전산화 추진을 위한 각부처 실무조직 및 기능 보강
- 국가전산화사업 관련 정부기능 정립
- 전문기관의 기능분담을 통한 전문화 및 체계화
- 민간단체의 자율적 성장 발전 지원
- 정부의 육성지원 체제 구축

다. 개선방안

기본방침

- 국가 차원에서 종합 추진 기구 확보
- 국가전산화사업 관련 정부기능 정립
 - 유사중복기능의 합리적 조정
 - 능력기능의 보완 및 종합정책 기능 부여
- 국가전산화 관련 정부의 육성·지원 체제의 보강

국가전산화사업 관련 정부기능 정립

가. 목적

- 국가전산화의 성공적 추진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 국민생활 편의 증진

나. 국가전산화사업 주요 정책과제별 관장 부처 현황

○주요정책 과제별 관장부처

구 분	주요 관 장 부 처	협 조 부 처
1. 미래정보화사회 대비 종합정책의 수립·추진	없음	없음
2. 국가전산화사업 추진 ○관련법령·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민간분야 전산화 지원 ○소관별 전산화 추진	총무처, 과기처, 국방부, 체신부, 총무처, 과기처, 국방부, 체신부, 안기부, (한국은행) 없음 소관 전부처	기타 전부처 내무부, 교통부, 노동부, 관세청, 보사부, 경제기획원, 문교부, 상공부 상공부, 체신부, 과기처

구 분	주 요 관 장 부 처	협 조 부 처
3. 정보산업의 육성 ○분야별 육성 -H/W산업 육성 -S/W산업 육성 -통신산업 육성 ○분야별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공급능력 확대 및 수요창출	상공부 과기처 체신부 - -	과기처, 체신부, 경제기획원, 총무처 상공부, 체신부, 경제기획원, 총무처 상공부, 경제기획원, 총무처 과기처, 상공부, 체신부 과기처, 상공부, 체신부
4. 전산화 및 정보산업 관련 첨단 기술 개발 ○기술개발 체제 구축 ○소프트웨어기술의 중점개발 보급 ○최첨단 컴퓨터(H/W) 및 통신기술 개발 ○반도체, 신소재 등 기존기술 연구개발 ○첨단기술 인력양성	과기처 과기처 과기처, 상공부, 체신부 과기처, 상공부, 체신부 과기처, 상공부, 체신부	체신부 상공부 전 부처 전 부처 전 부처
5.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국가적 DB구축 및 정보자원의 종합관리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표준화사업 추진 -이기종시스템간 호환성확보 -각종매체(전화, 단말기, TV등)간 상호접속 시책 -전산망 기술기준 제정 -업무처리방식 및 양식의 표준화 ○종합정보통신망(ISDN)구축	없음 상공부 체신부 체신부 총무처 체신부	총무처, 과기처, 체신부 총무처, 체신부 과기처, 상공부
6. 이용자의 대응능력 제고시책 ○컴퓨터 단말기의 보급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 개발 ○국민전산교육 시행	체신부 총무처, 과기처, 국방부, 문교부, 체신부	총무처, 문교부, 체신부 문교부
7. 정부의 지원체제 구축 ○세제, 금융 및 재정지원 ○행정, 제도적 지원	상공부, 재무부, 체신부, 과기처 전 부처	전 부처

○주요 부처별 관련법령 현황 및 중복관장업무

구분 \ 부처별	상 공 부	체 신 부	과 기 처	총 무 처
관련법령	• 공업발전법 및 시행령	•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전기통신기본법 및 시행령 • 공중전기통신 사업법 및 시행령	• 과학기술진흥법 및 시행령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시행령 • 전자계산조직의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규정 및 시행규칙
주요규정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육성 • 시스템 S/W 산업육성	• 전산망 기본 정책수립시행 • 정보통신발전 정책 • 정보통신, 방송기술 개발 및 표준화	• 정보산업 기본정책 • 시스템 및 S/W개발 육성	•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 행정전산요원 수급계획
관련부서	전자전기공업국	통신정책국, 전파관리국	기술정책실	행정관리국

문제점

- 현재 조직으로는 법체계와 기술발전의 조화가 불가능
 - 관련법령 및 제도와 현실여건과의 괴리
 - * 현행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급속한 정보산업 기술 발전등 현실 여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
- 종합정책의 수립 및 추진조직의 기능 취약
 - 현재의 정부조직은 산업사회의 주요정책기능을 전제한 것으로 미래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정부기능으로는 미흡
 - 첨단기술의 혁신, 매체간 융합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부처별 업무 분담이 상호중복 또는 필요기능 부재
 - 미래사회를 대비한 종합정책의 추진력 미흡
- 국가전산화 및 정보산업 관련 정부기능의 분산·중복
 -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에 혼선 야기
 - 의사결정 지연, 추진능력 약화로 한정된 자원 낭비의 우려
 - 급변하는 정보산업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처미흡

- 국가전산화 및 정보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의 일관성 제약
- 국가전산화사업에 대한 주도적 추진기능 결여 및 협조체제 미흡
 - 정부 각부처의 전산화업무 추진이 관련사업의 자율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보다는 규제와 관리등 실적 위주의 상호견제에 치중
 - 미래산업의 활성화와 환경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한 제도적 탄력성이 미약

체계화 방안

- (1) 기본방향
 - 국가전산화 및 정보산업 관련 종합정책 수립·추진과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중앙정부 기능 확보
- (2) 추진방안
 - 〈제1안〉 : 중앙부처신설(가칭 “정보통신부”)
 - 방안
 - 국가전산화 및 정보산업담당부처 신설
 - 관련부처(상공부, 체신부 및 과기처 등)의 국가전산화 및 정보산업 관련정책과 집행 기능 흡수·통합
 - 현행 전산망조정위는 비상임 심의·조정 기구로 존치

○임무

- 국가전산화 및 정보산업 관련 종합정책 수립 및 집행
- 정보화사회 대비를 위한 종합 정책 수립 및 집행

○필요조치 사항

- 국가전산화 및 정보산업 관련 정부기능 및 조직의 조정
 - :상공부, 체신부, 과기처, 총무처 등 관련 기능 및 조직을 신설부처로 이관(체신부 폐지도 검토 필요)
- 부처별 전산업무 추진을 위한 전산조정관 설치
- 법령체제의 정비
 - 정부조직법 개정 (정부조직 및 직제 개정)
 - 국가전산화 및 정보산업 관련 국가적 정책과 제의 종합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가칭 “정보화사회 촉진법”으로 통폐합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발전법, 과학기술촉진법, 과학기술진흥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S/W개발촉진법 및 전기통신 기본법 등)

〈제2안〉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신설(가칭 “국가전산위원회”)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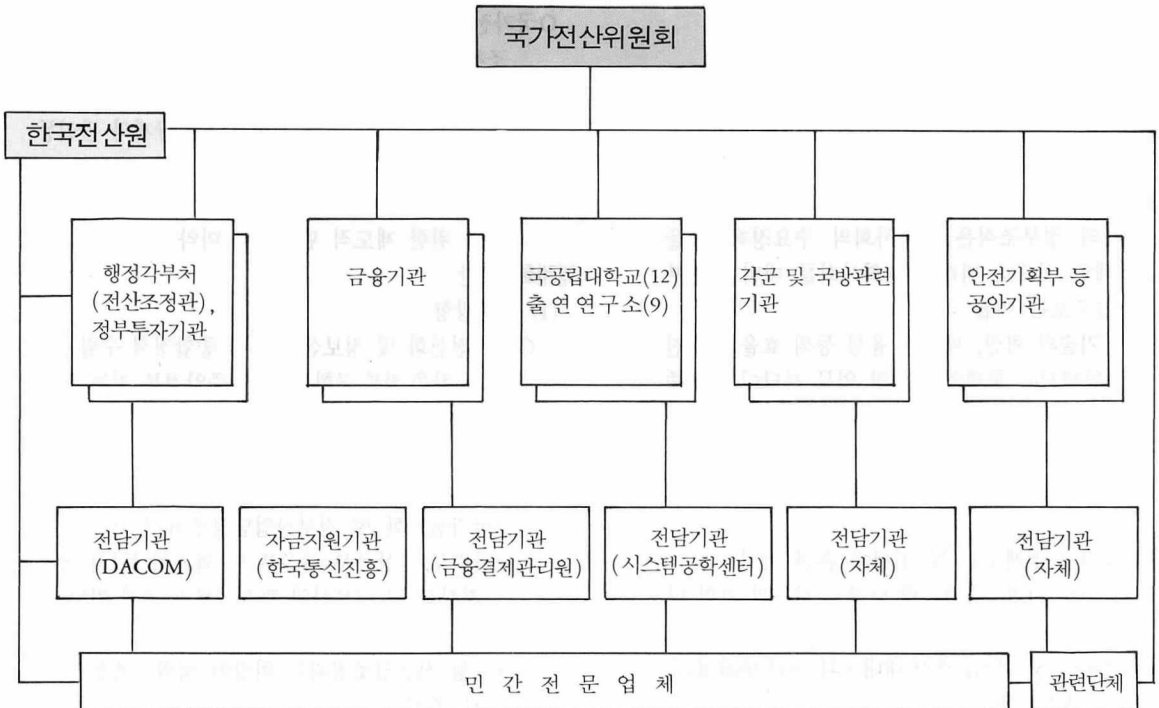
- 상임위원을 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함
- 국가전산화사업 완료시까지 한시적 설치운영 (10년정도)
- 기존 실무위 및 추진위의 기능 흡수
- 기존 망별 총괄기관 및 사무국조직과 기능을 대체 흡수
- 기존 정부기관조직의 최대 활용으로 신규 증원 인원 최소화(30명 미만)

○임무

- 국가전산화 관련 부처별 정책과 사업집행의 종합·심의 조정
- 정보화사회 관련 종합시책 수립·추진

○필요조치 사항

제2안 채택시 국가전산화 추진체계도



- 망별 총괄기관의 필수기능 및 인원이관
- 부처별 전산업무 추진을 위한 전산조정관 둠
- 법령체제의 정비
 - 정부조직법령 개정(정부조직 및 직제개정)
 - 국가전산화 및 정보산업관련 국가적 정책과제의 종합추진을 위하여 관련법령을 가칭 "정보화사회촉진법"으로 통폐합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발전법, 과학기술촉진법, 과학기술진흥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S/W개발촉진법 등)

○대안의 선택

- 제1안은 대폭적인 조직개편과 인사 조치 필요함
- 제2안은 현행 조직과 기능보강 및 조정으로 가함

구분	제1안 (중앙부처 신설)	제2안 (협의제 중앙행정기관 설치)
장점	○국가전산화 및 정보산업 관련 정책 및 집행기능의 일원화	○부처별 국가전산화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기관간 이해 상충해소 및 협조·지원체계 강화
단점	○관계부처 이해상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예상	○부처별 소관 주장으로 정보산업부문의 종합정책 추진기능 약화 우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제1안을 추진하되 우선 제2안을 건의함

한국이동통신서비스 공중통신사업자 지정

한국이동통신서비스가 지난달 공중통신사업자로 지정되었다.

자동차전화와 무선호출기의 시설, 관리,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이동통신은 지금까지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업무수탁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공중통신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얻게됨으로써 이동통신은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해 이동통신 전담사업자가 됐다.

지난 84년 설립된 이동통신은 자동차 공급증대에 따른 자동차전화의 수요증대로 전문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지난 5월말 현재 자동차전화 가입자수는 약 1만2천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전화는 지난 85년 6천6백27대에서 86년 7천37대, 그리고 지난해에는 1만2백8대를 기록하여 연평균 약 50%에 가까운 성장율을 기록해 왔다. 서비스지역으로는 서울 및 수원·안양 등 수도권일부가 해당되고 있는데 이동통신은 수요의 전국적 확산에 대비하여 서비스 지역을 전국 대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8월말까지 부산을 중심으로 마산, 창원, 김해를 연결하는 시설을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광주, 대구, 대전지역에도 시설을 갖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의 공중통신사업자 지정으로 국내 공중통신사업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데이터통신, 한국항만전화, 한국여행정보 등 모두 5개기관이 됐다. ■